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해야”

### 김철수 도의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헌법 기본정신에 부합”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의 법제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경제위원장은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당수 소상공인 등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 실적 선방에도 민간소비가 대폭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 역성장 배경엔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의 매출감소에서 기인했으며,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이 급증하며, 폐업사태가 속출해 대출금이나 자비로 근근이 버텨왔던 이들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소상공인 등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성실히 준수했지만, 경



김철수 도의원

제적 손실을 입었어도 법률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법률적 사례와 비교해봐도 국가적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제한, 고위험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가족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족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유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 또는 가족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의료인과 격리 치료 대상자의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과 감염병환

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조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예방 목적의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행정명령으로 똑같이 영업 손실을 입었음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 등만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K방역은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K방역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면서 ‘경제적 손실보상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2월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중기부 등에 송부된다. /유호상 기자

## 전통무예 발전 근거 마련

### 문승우·이정린 도의원, 조례안 발의 체계적 보전 등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전통무예 진흥·활성화 큰 기여 예상



문승우 도의원



이정린 도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 이정린(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1)의원이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됐고,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환담장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박병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도내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신규지구 27곳 선정

### 민주 이원택 의원, 총사업비 1811억원 확보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올해 전북도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로 27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1,811억원(총사업비)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및 물손실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영농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



이원택 의원

수·보강 및 저수지 준설과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지구로 선정된 27개 지구는 운암지구(임실 강진, 270억), 서축지구(김제 백구, 46억), 불로지구(김제 금구, 54억), 교원지구(김제 교원, 40억), 우천지구(부안 보안, 55억), 하장지구(부안 동진, 232억), 언백지구(부안 하서, 86억), 대초1지구(부안 상서, 40억) 등이다.

이들 지구에는 취수탑 보강 및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저수지와 수문 등에 대한 다양한 보수·보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올해 전북도내 수리

시설개보수사업 예산으로 871억원(총사업비 4,825억원)이 최종 확보됐다”고 밝혔다.

간계시 관내 14개지구(214억원), 부안군 관내 10개지구(71억원) 등 이번 신규지구로 선정된 27개 지구를 포함해 전북도내 87개 지구에 각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은 “노후되고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재해예방 및 농민들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 “전북도내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장들, 골목상권 선결제 결의문 채택

###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비대면 영상 총회의 참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중구의회 의장)는 지난달 29일 비대면영상 정기총회를 갖고 일일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동화 전북협의회장 등 의장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생계위험을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한 이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자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캠페인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선결제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동네업소를 방문해 일일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실제 물건이나 음식은 재방문해 얻음으로써 골목상권



지난달 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비대면 영상 정기총회에 참여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을 살리자는 취지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차갑게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원들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의 고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행안부 지방의회 관련 부서장 개방형 임용을”

### 김대중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지방의회와 관련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 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대중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돼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은 소수의 변화에 그치고 있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지방의회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국·과장급 공무원 23명 중 민간인 등에게도 그 직위가 개방돼 있는 자리는 50%에 가까운 11개나 되지만, 정작 지방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단 한 번도 외부에 개방된 적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일반직 공무원들이 차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속사정을 잘 알고, 지방의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업무 부서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해 지방의회에 몸담았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출신자, 민간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게 됐다”고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대중 의원의 건의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3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봄철 산불 대책본부 운영

###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예방활동·사전대비·대응 강화 임차헬기 배치·산불감시원 등 운영으로 대응체제 가동

전북도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도는 산불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권역별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배치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용 등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 강수량 전망이 2~3월은 평년과 비슷하나, 4월 이후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또한, 영농철 시작과 야외 활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동안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한다.

이에,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 연휴, 청명·한식, 어린날, 부처님 오신날 등 주요시기별 맞춤형 특별대책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산불 발생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구축을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한다.

산불 취약 등산로 입구, 산 연접 도로변, 입산통제구역 길목 등에는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역에는 80대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해 감시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 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고창), 동북부산악권(임실)로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를 갖춘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89천h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2개소 442km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2월 말까지 고추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등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산불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한다.

또한, 3~4월 중에는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죄 및 살화죄 등 엄중 조치한다. /유호상 기자

## 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이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

핫라인은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해 3일 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다.

매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 182, 추석 108) 접수돼 2019년 대비 5.1%(14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역대급 장미와 태풍에 따른 농수산물 작황 부진에 더해, 최근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각종 신선식품, 과일, 생필품 등 물가의 오름세와 코로나

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 증가로 다수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북도 소비자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최근 한파에 AI까지 악재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접수 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청 소비자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박용근 도의원,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낮아”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장, 장수)의원이 최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4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9급 52.4%, 8급 38.1%, 7급 47.3%, 6급 33%이고, 5급은 27.8%, 4급 8.4%로 나타났다.

특히, 4급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여성공무원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호상 기자